

# 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(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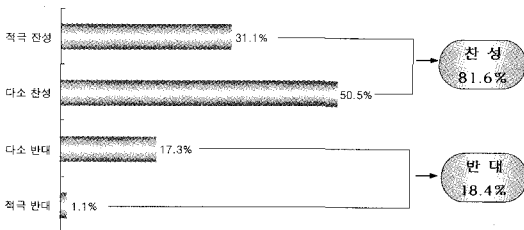
자료제공 환경부

## 13.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찬반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, 과반수 이상(81.6%)의 응답자들이 '찬성한다'는 긍정적 의견(적극 찬성 31.1%, 대체로 찬성 50.5%)을 나타냈고, '반대한다'는 부정적 의견은 18.4%(적극 반대 1.1%, 대체로 반대(17.3%))로 조사되어, 긍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러한 결과는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.

■ 신고포상금 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, 지역별로 부산/경남(85.0%), 인천/경기(84.4%), 광주/전라(85.8%) 거주자, 직업별로 주부(85.3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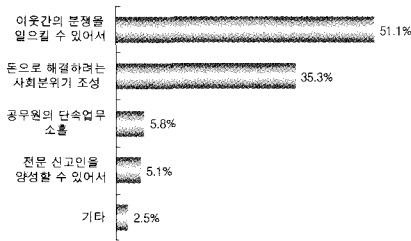
< Base=1,500 >

## 13-1.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반대이견

### 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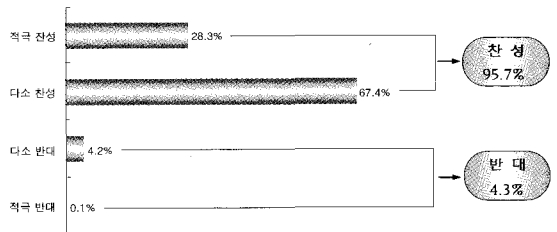
□ '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'를 반대하는 276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, '이웃간의 분쟁 소지'를 지적한 의견이 51.1%로 가장 높게 나타나,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따른 이웃간의 분쟁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돈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풍토 조성때문에' (35.5%), '공무원의 단속업무 소홀' (5.8%), '전문 신고인을 양성할 수 있어서' (5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 향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취지의 지속적 對民 홍보 활동과 함께 이웃간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, 그리고 합리적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.

■ 신고포상금제 반대 이유로 '이웃간의 분쟁 소지'를 지적한 의견은 50대 이상(77.3%), 대구/경북(78.1%) 거주자, 주부(62.7%),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< Base=276 >

적 의견이 95.7%(절대적 찬성 28.3%, 찬성하는 편 67.4%)로 나타났고, '반대한다'는 부정적 의견은 4.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, 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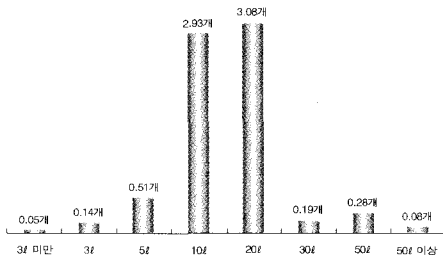
< Base=1,500 >

### 14. 가구별 월평균 쓰레기 봉투 사용개수 및 구입 비용

#### 결과분석

□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월평균 쓰레기 봉투 구입 비용은 2,6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, 규격별 사용개수에 있어서는 '20 l' 봉투(3.08개)와 '10 l' 봉투(2.93개)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, 그 다음으로 '5 l' 봉투(0.51개), '50 l' 봉투(0.28개), '30 l' 봉투(0.19개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
■ 월평균 쓰레기 봉투 구입 비용은 지역별로 대구/경북(3,081원), 대전/충청(3,547원), 직업별로 자영업(3,226원), 주거형태별로 상가주택(3,072원)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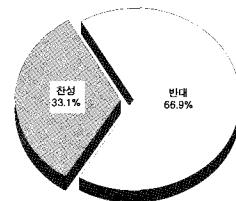
< Base=1,443 >

### 16.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

#### 결과분석

□ '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'는 의견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, '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찬성한다'는 의견은 33.1%로 나타났고, '자연훼손이 심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'는 의견은 66.9%로 나타나, 개발보다는 자연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■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, 지역별로 서울(75.0%), 광주/전라(76.5%)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

< Base=1,500 >

### 15. 생태계보전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찬반의견

#### 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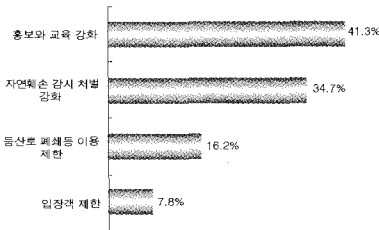
□ 생태계 보전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 '찬성한다'는 긍정

### 17.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

#### 결과분석

□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'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'를 지정한 의견이 41.3%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그 다음으로 '불법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·처벌 강화' (34.7%), '자연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등 이용제한' (16.2%), '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' (7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 이러한 결과는 감시나 처벌, 제한 등의 법적 제약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이용객 및 일반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.

■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'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'는 의견은 지역별로 인천/경기(47.6%), 대전/충청(49.0%), 강원(56.6%) 거주자,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(48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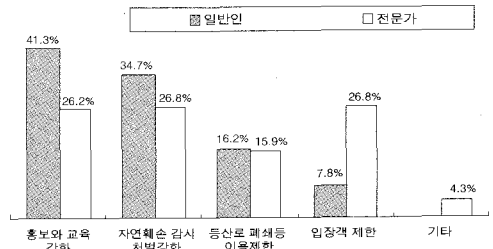


< Base=1,500 >

#### 결과분석

□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'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' (26.8%)과 '불법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·처벌 강화' (26.8%), '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' (26.2%) 등을 비슷한 비율로 지적함.

■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'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'를 지정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, 환경전문가들은 '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'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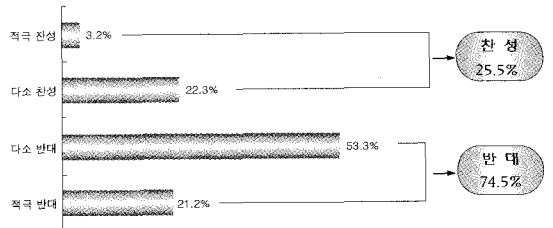


### 18.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한 찬반의견

#### 결과분석

□ 습지나 갯벌 등의 매립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'찬성한다'는 의견은 25.5%(적극 찬성 3.2%, 찬성하는 편 22.3%)로 나타난 반면, '반대한다'는 의견은 74.5%(적극 반대 21.2%, 반대하는 편 53.3%)로 조사되어, '습지 및 갯벌' 매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■ 습지나 갯벌 매립에 대해 '반대한다'는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(78.6%), 광주/전라(86.3%) 거주자,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(78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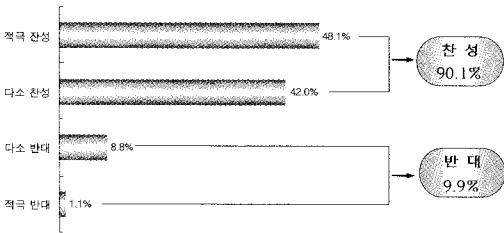


< Base=1,500 >

### 19.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처벌 및 명단공개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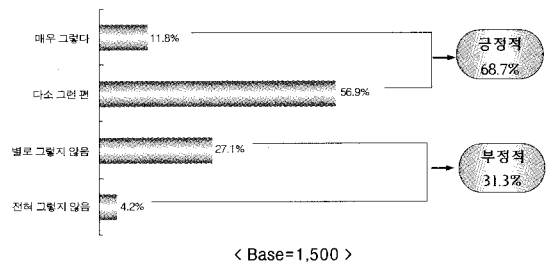
#### 결과분석

□ 야생동물 불법포획자와 보신용 섭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명단공개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, 응답자의 대부분(90.1%)이 '찬성한다'는 긍정적인 의견(적극 찬성 48.1%, 찬성하는 편 42.0%)을 나타내어, 야생동물 불법포획자와 보신용 섭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. 단, '반대한다'는 부정적 의견은 9.9%(적극 반대 1.1%, 반대하는 편 8.8%)임.



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(76.4%), 지역별로 인천/경기(73.7%), 광주/전라(78.7%) 거주자, 직업별로 화이트칼라(71.5%), 자영업(72.1%), 주부(71.1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■ 이러한 결과는 저공해 천연가스버스(CNG)가 갖는 장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.



## PART VI. 환경관련 제원 확충 방안

### 1. 저공해 천연가스버스(CNG) 이용의향

#### 결과분석

□ 저공해 천연가스버스(CNG)의 이용요금을 일반버스보다 상향조정했을 경우, 저공해 천연가스버스(CNG)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68.7%(매우 그렇다 11.8%, 다소 그런편이다 56.9%)로 나타나 반면, '이용할 의향이 없다'는 의견은 31.3%(전혀 그렇지 않다 4.2%, 별로 그렇지 않다 27.1%)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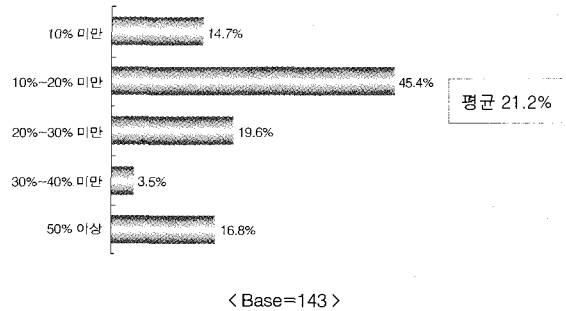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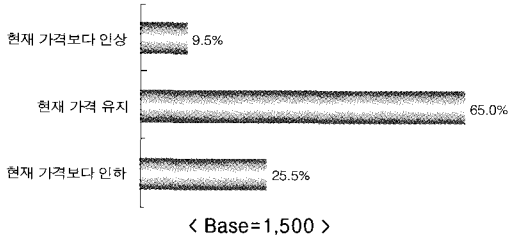
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요금이 인상되어도 이용하겠다

### 2. 쓰레기 봉투가격 조정에 대한 의견

#### 결과분석

□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5.0%가 '현재가격을 유지해야 한다'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. 반면 '현재가격보다 상승해야 한다'는 의견은 9.5%(143명), '현재가격보다 하락해야 한다'는 의견은 25.5%로 조사됨. 97년 9월 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'상승해야 한다'는 의견은 22.8%가 감소하고, '하락해야 한다'는 의견은 14.0%가 증가해, 현재의 쓰레기 봉투 값이 예전보다 비싸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■ 전체적으로 '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'를 위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보다는 현재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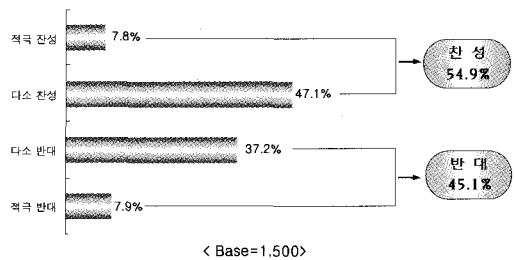
### 3.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찬반의견

#### 결과분석

□ 수질향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수도물 비용을 실제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4.9%(적극 찬성 7.8%, 다소 찬성 47.1%), 반대의견은 45.1%(적극 반대 7.9%, 다소 반대 37.2%)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음.

■ 수질향상을 위해 수도물 비용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.

- 찬 성 : 대구경북(66.7%), 인천경기(64.0%), 강원(67.9%)
- 반 대 : 부산경남(54.7%), 광주전라(53.0%)



### 2-1.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의 적정선

#### 결과분석

□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'현재보다 높여야 한다'고 응답한 143명에게 적절한 인상수준을 질문한 결과, 평균 인상율은 21.2%로 조사됨.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10%미만 인상 14.7%, 10~20%미만 45.4%, 20~30%미만 19.6%, 30~40%미만 3.5%, 50% 이상 16.8%로 각각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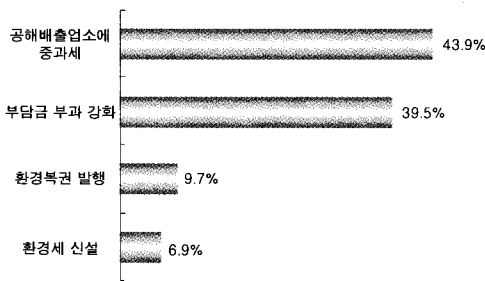
■ 97년 9월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조사결과에서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적절한 인상수준에 대한 평균 인상율이 12.2%로 나타남.

#### 4.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
##### 결과분석

-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'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' (43.9%) 방안과 '환경오염 유발 제품 부담금 부과 강화' (39.5%)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환경복원 발행' (9.7%), '환경세 신설' (6.9%) 등이 지적됨.
- 재원조달 방안으로 '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' 방안을 지적한 의견은 서울 (51.2%) 거주자, 대도시 (47.7%) 거주자,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(50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,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'오염자 부담'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.



<Base=1,500>

##### 결과분석

- 지난 95년 조사결과 및 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, '공해업소에 대한 중과세' 의견과 '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 강화'를 지적한 의견이 1위와 2위로 동일하게 나타남.
-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'오염자 부담' 원칙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항목	2000년 3월 응답률	97년 9월 응답률	95년 8월 응답률
· 공해배출업소에 중과세	43.9%	42.1%	47.9%
·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	39.5%	38.7%	37.5%
· 환경복원 발행	9.7%	6.9%	4.2%
· 환경세 신설	6.9%	8.3%	8.5%
· 환경공채 발행 *	-	4.0%	1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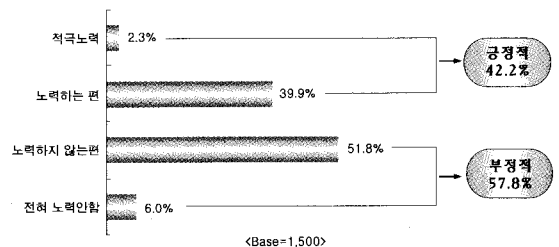
#### PART VII. 환경주체의 환경개선 노력 평가

##### 1.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평가

##### 결과분석

-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, '노력하고 있다'는 긍정적 평가는 42.2%(매우 관심 2.3%, 약간 관심 39.9%)로 나타난 반면, '노력하지 않고 있다'는 부정적 평가는 57.8%(전혀 노력 안함 6.0%, 별로 노력 안함 51.8%)로 조사되어,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미흡하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IMF 발생 이후 전 국민적 관심이 IMF 극복과 구조조정 등 경제 난국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분석됨.



<Base=1,500>